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6. 07. 27. (월)	총 6페이지	담당자	권주리 사무총장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http://www.teen-up.com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daum.net

총체적으로 타락한 대한민국의 도덕상을 고발한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 앞에서, 우리는 이 사회의 도덕성과 공공 시스템이 어디까지 추락했는가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퇴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국민의힘 소속)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과 사법 정의가 완전히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 사건을 관통하는 구체적 정황과 구조적 타락의 실상을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고발한다.

1.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아니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이다.

일부 언론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하 최영중) 사건을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명칭으로 보도하고 있다. 명백한 법적 용어와 본질을 두고 이러한 표현을 고집하는 데에는, 단순한 오보나 무지를 넘어 한국 사회가 성폭력과 성매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를 바라보는 아래와 같은 통념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 가해자 중심의 프레임과 범죄의 축소: ‘성매매’라는 단어는 거래의 주체가 쌍방에 존재한다는 착시를 준다. 피해 아동·청소년을 ‘거래의 당사자’나 ‘자발적 참여자’로 오인하게 만듦으로써, 성인 가해자의 위계

에 의한 착취와 강간이라는 본질을 교묘하게 희석한다. 돈만 주면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매매’에 대한 일부 언론의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의 파렴치하고 전근대적인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청소년 비행이나 사법 처리 대상의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자발과 강제 구분 없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모두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논하기보다 ‘조건만남’이라는 비하적이고 가벼운 용어로 포장해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천박하기 그지없는 구조적 타성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2) 가해 남성 카르텔과 사회적 보호막: 선출직 공직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언론이 자극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가해자의 도덕적 책임을 덜어주는 듯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기득권 카르텔 내부의 방어 기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의제장간'이라는 엄중한 법적 명칭을 쓰는 순간 가해자는 명백한 아동 성범죄자가 되지만, '성매매'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사안을 도덕적 일탈 수준으로 낮춰 관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결국 언론의 이러한 보도 태도는 피해 아동에게는 끊임없는 낙인을 찍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공권력과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부실한 공천과 누장 수사, 성범죄자가 시의회에 입성하려 했던 이유는 공적 권력을 가지는 것이 성범죄자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피해 아동 부모의 고소로 사건이 제기되었음에도 수사는 지나간 시간 동안 지연되었다. 그 사이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었고, 정당의 부실한 공천 검증 시스템 속에서 버젓이 당선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파렴치한 성범죄자는 대체 왜 시의회 의원이 되려고 했는가? 시의회 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는 더 많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최영중은 성범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시의원이 되면 만인에게 드러날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왜 부득불 시의원이 되려 하였을까? 그것은 그간 우리 정치권에서 수많은 권력형 성범죄자들이 공적 권력을 가지고 사건을 은폐하고 서로를 방탄해 온 전례를 불

때, 그 답이 명확해진다.

최영중은 이를 보고 학습한 것이다. ‘지방의회 배지를 달기만 하면 정치권과 조직이 알아서 감싸주고 비호해 줄 것’이라는 썩어 빠진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를 범죄자의 도피처이자 방탄막으로 삼으려 한 이 파렴치한 기획은, 공직 사회와 정당이 범죄를 방조해 온 구조적 토양 위에서 자라난 것이며, 그동안 우리사회의 정치적 토양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왔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3. 전직 부장검사 출신 당협위원장의 천인공로할 2차 가해와 사적 관계 의혹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최영중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으로 공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전직 부장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이하 김진모)이 내뱉은 천인공로할 망언이다. 김진모는 만 13세도 안 되는 아동을 상대로 벌어진 중대 범죄에 대해 “가해자가 미혼이라 불륜은 아니다”, 나아가 “여성이 어떤 상황에서 신고를 했는지, 상대 여성의 신고 의도를 따져봐야 한다”며 피해 아동에게 화살을 돌리는 극악무도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전직 검사 출신이라는 자가 평소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절대 사용하지 않았음직한 ‘여성’이라는 단어를 만 13세도 안 되는 아동에게 써 가며 성매매의 상대가 된 여성의 신고 의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등 저열하다 못해 쓰레기같은 말까지 내뱉은 것은 그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가해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나 유착마저 의심케 하는 이 파렴치한 비호 세력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명 뿐 아니라 정치적·법적 책임, 그리고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엄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당 차원에서 고소·고발하여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억울함을 주장하는 파렴치한 성범죄자

최영중은 채팅 앱을 통해 담배를 사주겠다며 만 13세 미만의 여중생에게 접근해 차량과 모텔 등에서 수차례 성매수하고,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했으며, 나아가 다른 여성과의 성행위 동영상을 보내거나 다른 미성년자도 데려오면 돈을 더 준다거나 외국인 여성 등과 성행위를 함께 하

자는 동반 성행위를 암시하는 메시지까지 어린 피해아동에게 보낸 행위는 역겨움을 넘어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 인두점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참혹할 지경이다. 그러면서도 사퇴 전까지 16일간의 의정비 200만~230여만원을 챙기고, 약 4,000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까지 청구했다고 하니, 최영중이라는 자가 어떻게 청주시의회 의원으로 공천될 수 있었는지, 후보자 검증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다시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영중은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내뱉는 뻔한 변명인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억울하다”며 적반하장의 주장을 하고 있다.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는 공권력과 시민사회를 향한 조롱 그 자체이다.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고며 수차례 법을 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 왔으나, 정작 법정에서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가해자들의 거짓말이 반복된다. 가해자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의 파렴치하고 악질적인 범죄를 가려보려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은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 피해 아동의 진술과 수많은 객관적 정황보다 더 큰 무게를 갖는 것이 현실이다. 성범죄자들의 몰랐다는 말 한마디 앞에서 법이 보호하려던 아동·청소년은 다시 증명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범죄자는 책임을 덜어낼 여지를 얻는다. 이것이 과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현행 사법부가 가해자의 ‘몰랐다’는 상투적 주장만으로 입증책임을 검사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더 이상 가해자들의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나이를 몰랐던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는 등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5. 통신기록영장을 기각한 검찰, 수사 방해인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은폐인가?

경찰이 추가 범행과 여죄, 그리고 증거 인멸 정황을 밝히기 위해 신청한 통신기록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통신기록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성범죄의 진실과 추가 피해자를 규명할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핵심 증거’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수사가 지연되는 동안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었던 만큼, 신속한 영장 집행은 필수적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를 가로막은 행위는 다음과 같은 무거운 의혹을 자아낸다.

1) 국회마저 속인 허위 해명과 말 바꾸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서영교 법사위원장 등)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영장 신청 내용에 대해 초기에는 “표지만 왔다”고 했다가 “자해 우려 한 줄만 있었다”며 입장을 수차례 번복했다. 실제로는 재범·증거인멸·도주 우려뿐만 아니라 피해자 위해 우려까지 경찰측에서 상세히 기재했음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이다. 이같은 작태를 통해 볼 때 그동안 청주지검이 힘없는 피해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공권력을 휘둘렀을지 짐작조차 하기 싫다.

2) ‘전직 부장검사’ 출신 공천권자와의 유착 의혹: 이같은 검찰의 이상행동은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통신기록에는 최영중이 피해 아동과 나눈 대화뿐만 아니라, 고소 이후 공천 과정과 수사 진행 중에 나뉘어 수 있는 비호세력들과의 대화 정황 또한 담겨 있을 수 있다. 이에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비호 정황이나 ‘수사 무마 청탁’과 같은 다른 중대 범죄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검찰이 ‘별건 수사’라는 핑계로 영장을 반려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 범위가 광범위해 법원 기각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이는 아동 성착취 범죄의 특성과 실체적 진실 규명 책무를 내팽개친 핑계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영장 기각과 연이은 거짓 해명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포기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권력형 범죄의 방탄막 역할을 자처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관련 검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우리는 지금도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있는 수많은 아동·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취약성은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그 취약성을 이용하여 돈으로 유인하여 성을 구매하려는 성매수자들과 그러한 시장을 유지시키는 플랫폼이다. 누구든 온라인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마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책임 역시 모든 어른에게 있다. 플랫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위험한 이용자를 차단·신고하고,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말고, 본 센터와 전국 16개소 성착취 피해 아

동·청소년 지원센터가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릴레이로 발표한 성명서 내용처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체계를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상담원으로 충원하고 3년 한시적인 사업이 아닌 안정적인 시설로 전환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최영중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 끝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인권과 정의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관련자의 자진 사퇴라는 꼼수로 책임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중대 범죄와 천인공로할 2차 가해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여야 한다. 나아가 자진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할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을 당 차원에서 즉각 공식 '제명' 처리하고, 어떻게 이러한 부실 공천과 당선 가능성이 가능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성역 없는 수사 의뢰와 공천 시스템의 원천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충북지역 아동·청소년과 여성, 시민, 사회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이번 사건의 진상이 한 치의 숨김없이 낱알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무관용의 엄벌과, 부실 수사를 자행한 수사·사법기관과 관련 정당의 진심 어린 반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아동·청소년/사이버/성착취(성매매 등) 관련 이슈 생산과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십 대 여 성 인 권 센 터